

‘직불금’ 정면 돌파 VS ‘국감 무력화’ 규탄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금융 위기 때문에 주목받지 못했던 국감이 종반 이후 터진 ‘쌀소득 직불금’ 파동으로 달아오르며 국민의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또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정보기관의 국정감사 ‘사찰’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야간 막바지 힘 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 18대 국감 종반 각 당 전략

◇한나라당=한나라당은 19일 원내대선회의에서 향후 국감에서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수세적 자세를 버리고 공세적 자세로 일관하는 동시에 국감 직후 이뤄질 핵심 법안 등의 심의에 대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쌀 직불금의 부당 수렴과 관련, 전 정부의 은폐와 제도적 허점을 거론하는 등 참여정부 책임론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벌써 이 사건을 ‘전 정권 시절에 이뤄진 농심(農心) 기망 은폐사건, 잘못된 정책,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로 규정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남은 기간 법사위를 통해 작년 감사원의 직불금 감사 결과에 대한 참여정부 정권 차원의 은폐 여부를 파헤치고, 미진할 경우 국감 종료 후에도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국감 직후 최대 이슈로 부각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안의 이슈 점화에 나서 ‘국회의 조기 비준동의의 당위성’을 알리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산분리 논쟁에서도 야당을 압박, 이명박 정부 금융개혁의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각오다.

◇민주당=민주당은 쌀 직불금 부정 수급, 정부 및 여당의 국감 무력화 책동, 경제위기 대책 등을 집중 공격하기로 했다.

쌀 직불금 문제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목적에서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진상 규명을 위해 당 자체 조사단 활동을 벌이는 한편 국정 조사를 추진하고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등 연루자의 책임을 철저히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정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피감기관장들이 고압적 자세로 국감에 임하는 등 국감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 여권의 국감 무력화 책동을 추궁하기로 했다. 특히 환경노동위 국감 과정에서 정부기관 별로 국감 진행 상황을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에 보고하고 있다는 문건이 발각됐다고 주장하면서 당내 진상 조



민주당 정세균(앞줄 오른쪽부터) 대표, 원혜영 원내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19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감 대책 등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참여정부 책임론...은폐 여부 진상 규명 野 경제 위기 대처 특단의 대책 촉구키로

사단을 꾸리고 관련 상임위에 해당 기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경제위기의 경우 비상한 금융위기 상황임에도 정부가 안전한 태도로 일관,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의 국감 무력화 전략과 민주당의 정치 공세 전략 속에 정책국감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국가정책성 재정립, 따뜻한 보수 등 선진당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헌 정세는 난국, 정면 돌파가 해법”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위기 속 적극 대응 주문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은 19일 현 정국과 관련,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 지도부가 현 상황을 전회위부의 기회로 삼으면 한다”면서 “방법은 정면돌파”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발언대’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힌 뒤 “역대 정부가 다 그랬다. 시대적 과제, 국민의 요구를 이행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헌도, 행정구역개편도, 공기지 4개 소득구간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소득구간에서 상속, 증여세를 인하를 지지하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었다.”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동산의 주된 소유계층인 40세 이상(69.0%)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권에 대한 보복이나 야당 기축이 아닌 여차피 묻어두면 다시 터질 악습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처치로 진정 될 일이 아니면 실상을 파헤치고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이 지향하는 국정운영 철학이 뭔지 고민 한번 해본 적이 없고 한나라당 집권 과정에서 당원들과 맘 한방을 흘려본 적이 없이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주요 정부직에 부지기수”라고 일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체육기금 용자, 특정종목 치우쳐”

국감브리핑

■ 방통위 서갑원 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용자사업이 골프 등 특정 종목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44개 스포츠산업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용자사업의 최근 5년간 내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축구와 배드민턴 등 대중 체육종목에는 평균 1종목당 2억5천만원



을 지원하고 있지만 골프 종목 1곳에만 246억 원 (60%)이 지원될 정도로 편중되게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체육진흥과 생활체육인프라 조성에 힘써야 할 공단이 특정 스포츠 종목에만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스포츠산업 업체(체육공공 생산업체, 스포츠 서비스업체, 체육시설 설치업체) 용자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받은 총 133개 업체 중 체육시설 설치업체가 103개 업체로 용자금 407억 가운데 350억으로 절대 다수와 금액을 차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선 관록... ‘내공 정치’ 돋보여

국감 인물

국토해양위 김성곤 의원

‘도(道)의 정치’를 모토로 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3선의 중진으로 성장한 김성곤 의원(여수갑)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록의 내공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호통치거나 욕박지르기 보다는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실한 대책을 요구, 주위의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토부 국감에서 여수신항의 무역항 기능 배제와 관련 “여수신항은 광양항의 서브항 기능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여수·광양 항만공사 설립의 최대 관건이라는 점에서 무역항 기능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또 지난 10일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호남고속도로 등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휴게소가 충분치 않아

좁은운전 유발 요인이 높다”고 지적, 공사측으로부터 “호남선 구간은 경제성이 높지 않아 민자 참여가 저조하지만 안전을 위해 간이휴게소를 더 건설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했다.

지난 13일 해경에 대한 국감에서도 해양경찰학교의 여수 이전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지방비 부담민을 요구할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 건설 국고 재원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지적, 청장으로부터 “공감하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목포 지역위원장 박지원 의원

해남·진도·완도 위원장 김영록 의원

민주당은 지난 17일 공석 중이던 목포지역 위원장에 박지원 의원, 해남·진도·완도 지역 위원장에 김영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두 의원은 모두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후 지난 8월 민주당에 복당했다.

민주당은 이날 또 경기 화성갑지역위원장에 박봉현 전 화성시 부시장, 충북 제천단양 지역위원장에 권건중 전 제천시의회 의장, 충남 공주연기지역위원장에 박수현 전 열린



〈박지원 의원〉



〈김영록 의원〉

우리당 공주연기 당원협의회장, 충남 홍성 예산지역위원장에 서중철 충남도위원을 각각 배치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중부세 개악저지 및 부가세 인하를 위한 1천만 국민서명운동본부 추진본부 지역본부 구성을 완료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 80% “MB 정부 감세정책 긍정적”

전경련, 성인 800명 전화면접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감세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46P)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각각 1%P씩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79.6%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득세율 인하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근로자, 주부, 자영업자, 학생의 순으로 많았고, 부정적인 답변은 14.6%에 그쳤다.

또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63.3%가, 법인세율 인하는 59.8%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감세정책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2배 이

상 많았다.

특히 논란이 많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9%가 불합리한 조세체제의 개편을 위해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세제개편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고학력일수록 긍정적이라는 평가의 비율이 높았다.

또 상속, 증여세를 현행 10~50%에서 소득세 수준인 6~33%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53.5%의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인 응답은 36.0%에 그쳤다.

월 소득 150만 이하에서 401만원 이상까지 4개 소득구간으로 나눠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소득구간에서 상속, 증여세를 인하를 지지하는 응답이 과반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었다.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에 대한 긍정 평가는 부동산의 주된 소유계층인 40세 이상(69.0%)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연합뉴스